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 시 2026. 11. 12.(목) 14:00 ~ 16: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 국회의원 김미애 · 서영석 · 허영 · 홍기원 백승아 · 서미화 초록우산

주 관 국회의원 서미화 초록우산

목 차 Contents

개 회 사

축 사 **조정식 국회의장** ····· 04

개회사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 06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 08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10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12

홍기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14

백승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16

서미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18

황영기 회장 (초록우산) ····· 20

주제발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 ·····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좌장 **배은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토론 **박현숙 연구소장** (경계선지능연구소) ····· 44

최승숙 교수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52

신유정 편집장 (느린인뉴스) ····· 58

김하영 팀원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 68

박현정 과장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76

구미정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80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 사



조정식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미화 의원님과 초록우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록우산은 1948년부터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습과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도 2014년 국정감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문제를 제기한 뒤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희정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하신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학계, 언론, 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저에게도 각별한 과제입니다. 지역구에서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만나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습니다. 2024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오늘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배움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뿐, 기회와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면 누구나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의 노력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제구는 2022년 부산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 구의회에서는 연구모임도 운영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NGO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느린 학습자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력이 몇몇 지역과 기관의 몫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심리·정서 지원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마다 빈틈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입법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나아가 조속한 입법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경계선 지능 아동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를 여러분과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경계선 지능 아동이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김희정 교육위원장님과 서미화·서영석·허영·홍기원·백승아 의원님,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가능성까지 다르게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다른 아이에게는 매일 넘어야 할 높은 문턱일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일,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조차 오랜 시간과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위험군 아동·청소년의 23.8%가 진학 유예나 전학, 학업 중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군의 3.3%와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절반가량은 대인관계 형성이나 지역사회 시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아동은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일반적인 교육·복지 체계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돌봄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7월「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취업·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특히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부터 직업훈련, 의사소통·가사·금융 교육까지 실질적인 자립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돌봄·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기에 시작된 지원이 성인기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와 제도 사이의 단절을 해소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그 어려움이 성인이 된 이후의 자립까지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서영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희정·김미애·허영·홍기원·백승아·서미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동은 저마다의 발달 속도와 특성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인지·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또래 관계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향후 진로와 자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칠수록 아동과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개별 가정이나 민간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아동의 특성과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교육과 치료부터 학교생활과 안전, 진로·취업과 자립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개별 학습지원과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정서·심리 상담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야 합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도 필요한 정보와 상담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제도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을 세심히 살펴 일상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미화 의원님과 초록우산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경계선지능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습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분명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 안에서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의 경계선지능은 단순한 학습 부진으로 오해되기 쉽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감 상실과 사회적 고립,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특정 시기에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으로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교육, 돌봄, 심리·정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경계선지능 아동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홍기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오늘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서미화 의원님과 초록우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계 현장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은 한 아이와 그 가족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과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기부터 아이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기에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좌절과 한계보다는 성취와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장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배움이 성인이 된 이후의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언론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요구들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7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따라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지속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백승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미애·김희정·서미화·서영석·허영·홍기원 의원님과 (사)경계선지능연구소 박현숙 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배움의 속도가 조금 느린 아이들을 세심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느린학습자들의 어려움은 제도 밖에 방치되었고, 이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배움과 삶 전체에 깊은 상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가 2024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고, 부처별 지원사업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아이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제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느린학습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제는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조기 발견부터 교육·복지·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권리가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가로막히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느린학습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연대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서미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님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호남대학교 배은경 교수님, 그리고 현장과 학계, 언론과 정부 등 토론에 참여해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습과 일상생활, 또래 관계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은 지역의 시범사업이나 민간의 노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 시기에 맞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 · 학습 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응답자의 43.7%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국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은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만큼 이제는 국가가 책임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인지적 어려움에 더해 불안정한 보호환경까지 함께 겪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5명 중 1명이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나타났고, 병역판정검사에서도 해마다 1천 명이 넘는 청년이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과 청년은 이처럼 우리 곁 다양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원의 틈에서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어느 한 시기나 한 기관에 그치지 않는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개입부터 심리 · 정서 지원, 교육과 진로, 자립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관계 부처의 협력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지 함께 짚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현장의 경험과 연구 결과가 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모든 아동이 저마다의 속도에 맞게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 회 사



황영기 회장
(초록우산)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김희정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허영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든 아동은 저마다의 발달 속도와 특성에 맞게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학습과 사회 적응,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존재하는 아이들임에도, 이들을 포괄할 제도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록우산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만난 경계선 지능 아동 중에는 학습과 또래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의 93.7%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79.9%가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지원의 공백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부담은 상당 부분 아동 개인과 가족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동기에 학습과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성인이 된 이후 취업,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계선 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들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서 지원부터 진로 준비에 이르기까지 성장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실제 겪는 어려움과 발달적 필요에 맞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가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 논의로 이어져,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법과 제도로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초록우산 또한 모든 아동이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

이민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 지능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

2026. 11. 12. /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01 배경과 목적

02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와 욕구
- 조사 개요, 조사 결과, 소결

03 제언

1. 배경과 목적

인지 기능의 연속선(continumm)상 정상 범주와 장애 범주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 지적 기능'은 DSM-5에서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그룹(V-code)로 분류되며, 이론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13% 규모로 추정됨

경계선 지적 기능인의 특성(선행 연구)

○ 인지기능이 정상범주와 장애범주의 경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기 개입, 발달·학습에 대한 지원 필요도가 높음

○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의 읽기 능력이 낮게 나타나는 등(Atkinson, 1984) 언어 등에서 취약하고 학업 및 작업의 처리속도가 느린 것으로 연구됨

○ 사회적응 수준이 낮아 이러한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공적 지원 대상 제외 – 지원의 사각지대

○ '경계선급 인지지능'이라는 사회적 취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기준에는 제외되어 공적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

○ '가장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원 인프라를 만들어 온 바에 따라, 그리고 '경계선 지적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제반 이해가 낮아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응하는 직접 서비스 및 사회적 지원 인프라는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관계 단절과 사회적 위험 노출이 쉬운 집단으로 예방적 지원 필요

○ 현대 사회의 높은 수준의 지적 기능의 요구와 맞물려서 경계선 지적 기능과 같이 드러나게 눈에 띄지 않는 경미한 인지 기능 제약은 생애주기 발달 과정, 경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높음

○ 고립·은둔, 관계 단절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으로 이에 대한 예방적 지원 필요

1. 배경과 목적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024) 수행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조사로 파악된 경계선 지적 기능 의심 아동 318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제시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024)

경계선지능인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 경계선 지능인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규모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온라인 조사)

경계선지능인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 조사 : 경계선 지능인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대면 면접조사 실시 (전국 약 500명 계획)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

전문가 포럼 운영 :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2.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와 욕구

1) 조사 개요 - 경계선 지능인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 조사

조사 목적

-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 및 학교생활, 사회활동, 정신건강 등 영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

대상자 기준

-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자
- 관련 프로그램(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조사 실시

- 전국 경계선 지능인 관련 자조모임, 경계선 지능인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 참여자 모집

- 훈련된 조사원이 경계선 지능인 아동의 보호자와 대면면접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25. 1. 15. ~ 4. 18.
- 조사 방법: 태블릿PC를 활용한 조사원과 응답자 1:1 대면 면접조사 (만 18세 이하: 보호자 응답 / 만 19세 이상: 본인 응답, 혹은 보호자 동석한 조사)

조사 내용

-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 학습 및 학교생활
- 일상생활 및 정신건강
- 사회참여 및 인권
- 취업 및 미래계획
- 가족 및 결혼
- 사회적 지원의 경험 및 욕구
- 응답자 사항

※ 조사 참여자는 본인 혹은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임을 인지하고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경계선 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사결과에서 사회적 지원 이용 경험이 높은 경향 등 으로 나타나 결과 해석시 고려가 필요함

2) 조사 결과 – 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일반 및 가족 특성

(1) 아동의 일반특성

○ 성별 분포

남자 64.2% (204명)
여자 35.8% (114명)

○ 학교 재학

미취학	7.2%
초등학교	61.3%
중고등학교	31.4%

○ 연령 분포

6세 이하 11.0%
7~12세 62.3%
13~18세 26.7%

(2) 가구 특성

○ 가구 유형

부모 가구	90.3%
모자 가구	6.9%
부자 가구	1.3%
조손 가구	0.6%
쉼터 등	0.9%

○ 가구 유형

2명 이하	6.9%
3명	28.3%
4명 이상	68.5%

* 가구원 수 평균: 3.77명

○ 월평균 가구소득 (2024년)

200만원 미만	6.9%
200~400만원 미만	17.3%
400~600만원 미만	30.2%
600만원 이상	45.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율

→ 7.2%

○ 다문화가정 비율

→ 3.1%

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일반 및 가족 특성

(3) 부모 특성

○ 부모 결혼상태

유배우	92.8%
사별·별거·이혼	6.0%
기타	1.3%

○ 부모 학력

모두 중졸 이하	0.9%
한쪽 중졸 이하	1.9%
모두 고졸 이상	24.2%
모두 대학교 이상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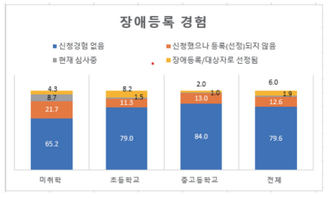
○ 응답자 연령

20~39세	14.5%
40~49세	75.8%
50세 이상	9.7%

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

- 경계선 지능 아동 중 장애등록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4%,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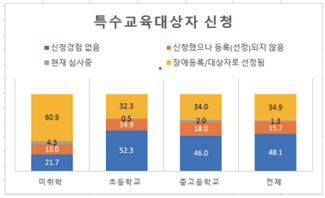
(1) 「장애인 복지법」 – 장애등록



- 장애등록자의 장애유형 (장애등록자 19명 기준 비율)

언어장애	42.1%	청각장애	10.5%
뇌병변장애	26.3%	지체장애	5.3%
시각장애	10.5%	정신장애	5.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대상자



다) 학습활동

(1) 정규 교육

○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 유형은 일반학교 다니는 경우가 초등학교(85.8%), 중학교(78.0%), 고등학교(72.7%)의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대안학교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고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응답한 경우인 72.7%는, 일반고등학교 60.6%, 특성화 고등학교(실업계) 12.1% 로 구분됨.

〈표 7〉 아동의 학교 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학교	85.8 *	78.0	72.7
일반학교-특수학급	10.8	17.0	18.2
대안학교	2.7	4.0	6.1
특수학교	* 0.7	1.0	-
검정고시	-	-	3.0
계 (N)	100.0 (295)	100.0 (100)	100.0 (33)

주: 현재 다니고 있거나 최종 졸업한 학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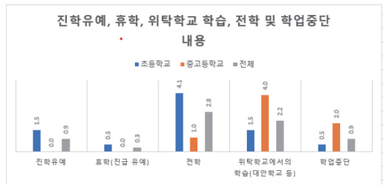
다) 학습활동

(1) 정규 교육

○ 아동이 학교 생활에서 진학유예, 휴학, 위탁학교 학습(대안학교 위탁 등), 전학 및 학업중단 경험은, 6.1%가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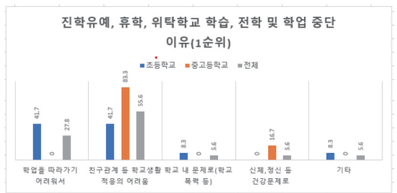
○ 진학유예, 휴학, 위탁학교 학습, 전학 및 학업중단 내용

- 전학이 2.8%, 위학학교에서의 학습(대안학교 등)이 2.2%, 진학유예와 학업중단이 각각 0.9% 수준임 (318명 기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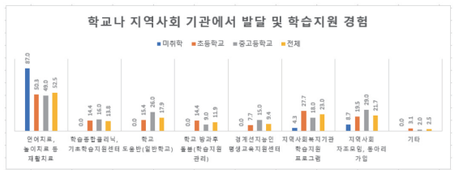
○ 진학유예, 휴학, 위탁학교 학습, 전학 및 학업중단 이유(1순위)

-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55.6%,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가 27.8%로 높음 (경험자 18명 기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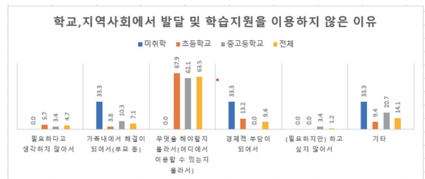


(2) 발달 및 학습 관련 지원

○ 발달 및 학습 관련 지원 경험은, '언어 및 놀이치료 등 재활치료'가 5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의 학습지원 프로그램'(23.0%), '지역사회 자조모임·동아리 가입'(21.7%), '학교 도움반'(17.9%), 교육청 사업인 '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습지원센터'(13.8%)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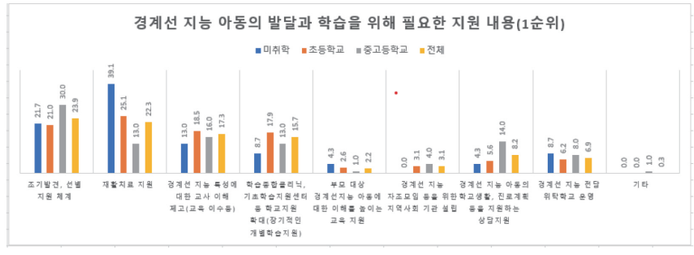
○ 모두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63.5%) 등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외에 '경제적 부담'(9.4%), '가족내에서 문제해결이 되어서'(7.1%) 등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아동의 발달과 학습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경우는 82.7% 였으며, 월 평균 부담금액은 평균 80.0만원 으로 조사됨.

(3) 학습, 발달 관련 필요 지원

○ 경계선 지능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국가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였으며, 1순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내용은 '조기발견, 선별지원 체계'(23.9%)와 '재활치료 지원'(22.3%)이었음
— 이외에 '경계선 지능 특성에 대한 교사 이해 제고'(17.3%), '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습지원센터 등 학교 지원 확대(장기적인 개별학습지원)'(15.7%),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생활, 진로계획을 지원하는 상담지원'(8.2%), '전담 위탁학교 운영'(6.9%) 등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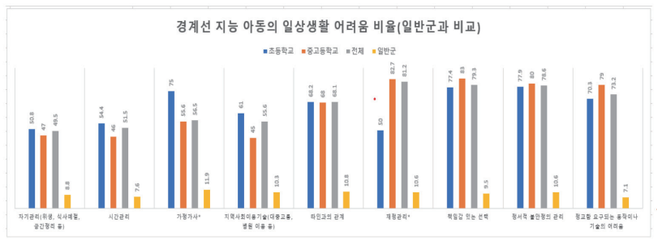


라) 일상생활과 정신건강

(1) 일상생활 기능

○ 주보호자가 응답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을 보면, 아동이 일상생활기능(9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높았음.

— 특히, 재정관리(81.2%), 책임감 있는 선택(79.3%), 정서적 불안정의 관리(78.6%), 정교한 동작이나 기술의 어려움(73.2%), 타인과의 관계(68.1%)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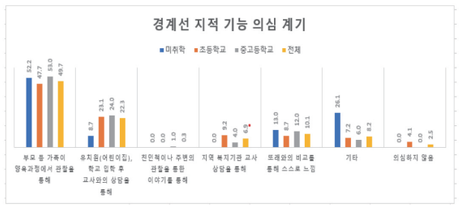


주: 1)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응답 / * 만13세 이상 응답
2) 수치는 '어려움+매우 어려움' 비율임

(2) 진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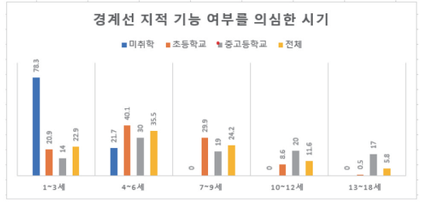
○ 경계선 지적 기능 여부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양육 및 교육 과정에서 보호자 및 교사의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의심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부모 등 가족이 양육과정 관찰을 통해'(49.7%)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입학 후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22.3%),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느낌'(10.1%)등이 높게 나타남.



○ 경계선 지적 기능 의심 연령은 전체 평균은 6.2세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이 2.5세, 초등학교는 5.8세, 중고등학교는 7.9세임

— 의심한 시기는 아동이 4~6세로 학령기 전 시기인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9세로 초등학교 저학년(24.2%), 3세 이하(22.9%) 등의 순서로 높았음.



(3)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인한 어려움

○ '학업 어려움'이 93.7%로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가 83.3%, '또래와의 갈등'이 79.9%,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음'이 71.4%, '미래에 대한 불안' 64.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고등학교 아동이 초등학교 아동 보다 어려움 경험 비율이 높은 경향임.

〈표 20〉 경계선 지능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학업의 어려움	87.0	92.8	97.0	93.7
가족과의 갈등	43.5	40.0	41.0	40.6
또래(친구, 선후배)와의 갈등	73.9	77.9	85.0	79.9
아동을 이해하고 믿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47.8	41.5	48.0	44.0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	69.6	81.0	91.0	83.3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음	65.2	65.1	85.0	71.4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의욕이 없음	34.8	35.4	58.0	42.5
미래에 대한 불안	60.9	58.5	77.0	64.5
건강이 안 좋음(신체,정신)	39.1	25.1	44.0	32.1
폭력, 절도, 거짓말 등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림	13.0	12.8	14.0	13.2
(N)	(23)	(195)	(100)	(318)

주: 1)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중복 응답

(4) 정신 건강

○ 최근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경우는 68.6%이며,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었던 경우(7.5%)를 포함하면 76.1%가 정신적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 했음.

○ 현재 정신과 약물 복용하는 경우는 51.6%로, 특히 학령기 이후 초등학교(49.7%), 중고등학교(64.0%)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약 복용 비율이 높아짐.

— 약물 복용의 주된 이유는 '과잉행동 주의력결핍장애(ADHD)'가 82.3%로 가장 많았고, '불안·공포·강박'이 29.9%, '행동문제(행동과다, 공격·자해·분노 조절 등)' 19.5%, '우울증·조울증'이 18.9% 등의 순서로 조사됨 (정신과 약물 복용 경우 164명 기준)

〈표 21〉 최근 1년동안 정신적 문제로 관련 전문가 상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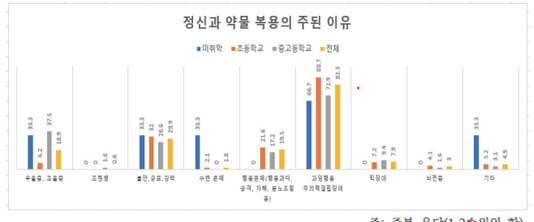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전문가 상담 진행	52.2	65.6	78.0	68.6
찾아가지 않았으나 상담 의사 있음	17.4	7.7	5.0	7.5
찾아가지 않았으며 상담 의사 없음	30.4	26.7	17.0	23.9
계	100.0	100.0	100.0	100.0
(N)	(23)	(195)	(100)	(318)

〈표 22〉 현재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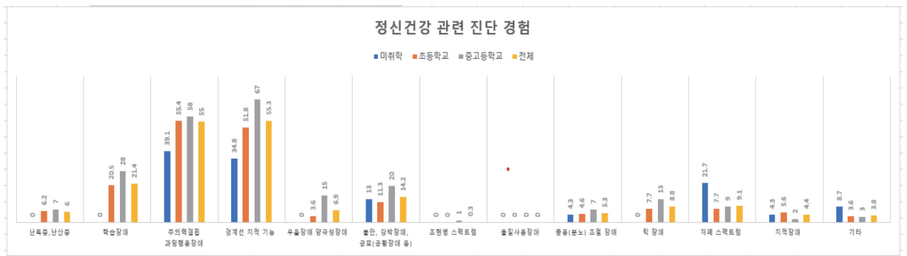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예	13.0	49.7	64.0	51.6
아니오	87.0	50.3	36.0	48.4
계	100.0	100.0	100.0	100.0
(N)	(23)	(195)	(100)	(318)



주: 중복 응답(1,2순위의 합)

(4) 정신 건강

○ 경계선 지능 아동이 지금까지 정신건강 관련해서 진단받은 내용을 보면, ‘경계선 지적 기능’ 55.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55.0%, ‘학습장애’ 21.4%, ‘불안·강박·공포(공황장애)’ 14.2% 등으로 나타남.



주: 중복 응답(모두 응답)

(2) 괴롭힘 피해 경험

○ 경계선 지능 아동이 지난 1년간 타인이나 비동거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28.0%로 약 1/4 이상으로 조사됨.

— 괴롭힘 가해자는, 친구 ·선후배가 97.8%, 교사 등 학교인력 6.7%, 치료 ·복지기관 인력 4.5%, 지역사회 지인 및 온라인 지인 각각 2.2% 등임.

○ 괴롭힘 유형은 언어 폭력, 관계 따돌림 등 정서적 괴롭힘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행위가 동반된 신체적 괴롭힘 경험이 높음.

— ‘정서적 괴롭힘’이 8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 괴롭힘’이 43.8%임.

〈표 27〉 지난 1년간 타인 혹은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예	13.0	25.1	37.0	28.0
아니오	87.0	74.9	63.0	72.0
계	100.0	100.0	100.0	100.0
(N)	(23)	(195)	(100)	(318)

〈표 28〉 타인 혹은 비동거 가족으로부터 괴롭힘 당한 내용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정서적 괴롭힘	66.7	87.8	83.8	85.4
신체적 괴롭힘	66.7	57.1	24.3	43.8
성적 괴롭힘	0.0	2.0	10.8	5.6
경제적 착취	-	-	-	-
기타	0.0	8.2	13.5	10.1
(N)	(3)	(49)	(37)	(89)

주: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중복 응답(모두 응답)

○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기관 내 인력(교사, 담당자) 혹은 사적 관계에 있는 가족,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41.6%로 높았음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30.3%), ‘피하거나 도망쳤다’(11.2%)

—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10.1%), ‘기관에 신고했다’(2.2%)

〈표 30〉 타인 혹은 비동거 가족으로 부터 괴롭힘 경험의 경우, 이후 대응 방식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	66.7	28.6	29.7	30.3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	33.3	8.2	13.5	11.2
괴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0.0	12.2	8.1	10.1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0.0	12.2	27.0	18.0
학교 선생님, 지원 기관 담당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0.0	30.6	16.2	23.6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0.0	2.0	2.7	2.2
기타	0.0	6.1	2.7	4.5
(N)	(3)	(49)	(37)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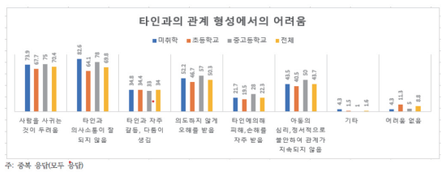
주: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중복 응답(모두 응답)

마) 사회적 관계

(1) 타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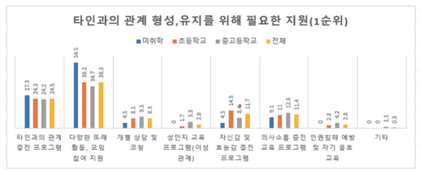
○ ‘사람을 사귀는 것이 두려움’(70.4%), ‘타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이해를 잘 못하거나 오해 발생 등)’(69.8%)이 높게 나타나, 소통의 어려움과 관계 맺기 자체의 두려움이 높음.

— 이외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받음’(50.3%),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관계 지속이 안됨’(43.7%), ‘타인과 자주 갈등,다툼이 생김’(34.0%), ‘타인에 의해 피해, 손해를 자주 받음’(22.3%) 등의 순서



주: 중복 응답(모두 응답)

○ 필요한 지원으로 ‘다양한 또래 활동, 모임 참여 지원’(38.3%), ‘타인과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24.5%)이 높게 나타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 기회 제공과 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욕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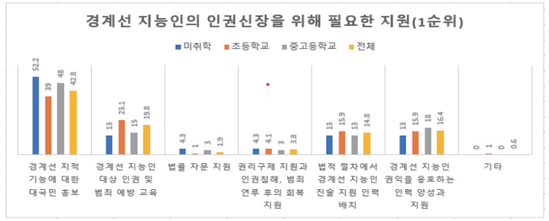
(3) 인권 보호

○ 아동이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배제, 차별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는, 66.1%가 그렇다고 응답함.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발달장애인의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62.2%(항상 느낌+가끔 느낌)

○ 경계선 지능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1순위),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캠페인 등)’를 통한 인식 개선이 42.8%로 높음.

—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 인권 및 범죄 예방 교육’(19.8%), ‘경계선 지능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력 양성과 지원’(16.4%), ‘법적 절차에서 진술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지원’(14.8%) 등이 높게 나타남.



마) 가족 관계와 미래 준비

(1) 가족 관계

○ 가족 관계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가족원과 갈등이 있다는 응답은 52.8%였으며, 주 갈등 구성원은 형제자매(38.1%), 아버지(34.5%), 어머니(23.2%) 등 순서임.

— 갈등 이유(1순위)는 '가족원의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35.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생활방식 및 습관 때문에'(26.2%), '경계선 지능 아동의 교육(학습) 문제로'(16.7%), '경계선 지능 아동의 행동문제(폭력 행동 등)로'(10.1%) 등임.

○ 경계선 지능 아동 양육의 어려움 수준은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는 경우가 90.2%의 높은 수준임. ('매우 어려움' 45.9%, '어려움' 44.3%)

〈표 34〉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이유(1순위)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가족 구성원의 자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21.4	32.4	46.2	35.7
자녀의 생활방식 및 습관 때문에	21.4	31.4	17.3	26.2
자녀의 교육(학습) 문제 때문에	21.4	14.7	19.2	16.7
자녀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21.4	6.9	3.8	7.1
자녀의 행동 문제로 인해(폭력행동 등)	7.1	10.8	9.6	10.1
자녀의 돈 관리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0.0	0.0	1.9	0.6
기타	7.1	3.9	1.9	3.6
계	100.0	100.0	100.0	100.0
(N)	(14)	(102)	(52)	(168)

〈표 35〉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

	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전혀 어렵지 않음	0.0	3.6	0.0	2.2
어렵지 않음	4.3	8.7	6.0	7.5
어려움	47.8	46.2	40.0	44.3
매우 어려움	47.8	41.5	54.0	45.9
계	100.0	100.0	100.0	100.0
(N)	(23)	(195)	(100)	(318)

(2) 미래 준비

○ 아동의 미래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내용은, 1순위로 '취업'(59.4%), '부모 사후 혼자 남겨지는 것'(16.7%)이 높았고, 이외에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8.5%), '소득(생활비)'(6.0%)로 조사됨.

○ 아동의 진로계획,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은 1순위로 '진로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구체적 지원인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정보 제공'(32.1%), '졸업 후 이용가능한 기관/사업체 탐방'(14.2%), '부모 상담 및 교육'(8.5%) 등이 높게 나타남.

〈표 36〉 미래의 걱정되는 내용

(단위: 명, %)

	1순위	2순위
취업	59.4	13.5
소득(생활비)	6.0	9.9
이성교제, 결혼	3.1	17.9
집 마련	0.6	0.3
자산 관리	1.6	7.7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8.5	14.7
건강관리	0.9	2.9
부모 사후 혼자 남겨지는 것	16.7	29.5
기타	1.3	1.6
걱정되는 점 없음/2순위 없음	1.9	1.9
계	100.0	100.0
(N)	(318)	(312)

주: 1순위 '걱정되는 점 없음' 응답자는 2순위에서 제외

〈표 37〉 진로계획,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

(단위: 명, %)

	1순위	2순위
부모 상담 및 교육	8.5	5.0
관련 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	32.1	29.2
진로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	44.7	34.3
졸업 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사업체 탐방	14.2	24.8
보호자 자조 모임	0.6	5.7
기타	0.0	0.9
계	100.0	100.0
(N)	(318)	(318)

바) 사회적 지원 경험과 지원 방향

(1) 사회적 지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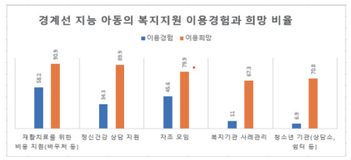
○ 경계선 지능 아동의 복지, 교육, 고용영역의 지원 이용 경험과 이용 희망을 보면, 이용 희망 비율이 대부분 80~90%수준으로 높았음.

— 반면 이용 경험 비율은 절반 혹은 1/3 이하 수준으로 낮음.

○ 복지지원

— (이용경험) 미취학 및 초등학교에서 '재활치료 비용 지원' 경험률이 높았고, '정신건강 상담 지원', '자조모임'은 중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남.

— (이용희망) '재활치료 비용 지원' , '정신건강 상담지원', '자조모임'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지원

— (이용경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27.0%, '교육청 지원 사업(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습지원센터)'이 25.8%로 높았고, '지역사회복지관 학습지원'이 19.8%로 높음.

— (이용희망) 학교 교육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학습지원, 지역사회 복지관의 학습지원 등 공공 및 지역사회 기관을 통한 학습지원 희망 비율이 높음.



(1) 사회적 지원 경험

○ 고용지원

— 이용 경험은 '진로탐색',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용 희망은, '진로탐색',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일 경험(인턴)',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 이후 직무지원' 등 진로 탐색과 경계선 지능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

〈표 40〉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고용 지원 – 이용경험과 이용희망

(단위: 명, %)

	이용 경험	이용 희망
진로탐색	7.3	92.7
직장인 기본소양,직무수행 기술교육	4.9	85.4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	7.3	80.5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4.9	90.2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2.4	87.8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일경험(인턴)	4.9	92.7
취업 이후 직무지원	4.9	90.2
창업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운영지원 등)	4.9	75.6
(N)	(41)	(41)

주: 1) 이용한 경험 비율 및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임
2) 만15세 이상 응답

○ 이용시 어려움 / 미이용자는 미이용 이유

— 이용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비율은 76.5%이고 그 내용은 '경제적 부담'(29.8%), '지원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19.3%),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서'(8.1%) 등 임

— 모든 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주된 이유는 '지원 내용을 몰라서'(36.4%), '이용(신청)방법을 몰라서'(27.3%),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18.2%) 등 임.

〈표 41〉 (이용자) 이용시 주된 어려움

(단위: 명, %)

	%
지원 내용이 기대와 달라서	19.3
지원 내용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8.1
지원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2.5
관련 종사자, 참여자등 관계가 힘들어서	2.5
경제적 부담으로	29.8
건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워서	0.4
기타	14.0
어려움 없음	23.5
계	100.0
(N)	(285)

〈표 42〉 (미이용자)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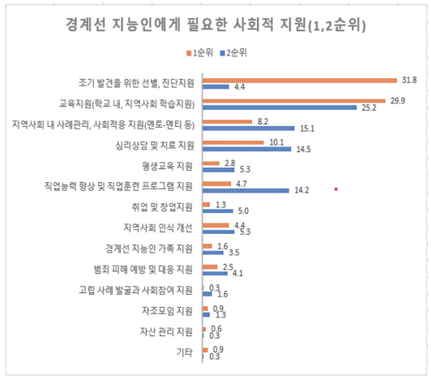
(단위: 명, %)

	%
지원 내용을 몰라서	36.4
이용(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27.3
(선별과정)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18.2
경제적 부담으로	3.0
함께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서	0.0
건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워서	0.0
기타	12.1
어려움 없음	3.0
계	100.0
(N)	(33)

(2)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향

○ 1순위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선별,진단 지원(조기 선별을 위한 지원체계, 경제적 비용 지원 등)과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욕구가 높았음.
—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 진단지원'(31.8%)과 '교육지원(학교내, 지역사회 학습지원)'(29.9%)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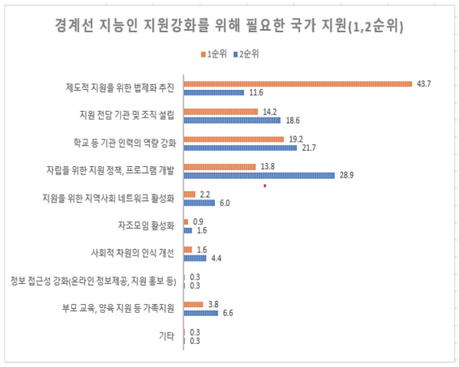
○ 2순위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교육, 사례관리 및 사회적응 지원, 심리상담, 고용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교육지원(학교내, 지역사회 학습지원)'(25.2%),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사회적응지원(멘토-멘티지원)'(15.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14.5%), '직업능력 향상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14.2%) 등이 높게 나타남.



(2)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향

○ 향후 경계선 지능인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가 노력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어서 조직, 인력의 역량 제고를 필요 내용으로 꼽음.
— 다음으로 자립에 대한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응답함.

· (1순위) '제도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43.7%), '학교 등 관계 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 제고 등)'(19.2%), '전담 기관,조직의 설립'(14.2%),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개발'(13.8%) 등
· (2순위)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개발'(28.9%)이 가장 높음



사) 소결

의심시기, 진단 및 제도 진입, 정규교육, 재활치료

의심 계기 및 시기	정규 교육 / 제도 진입	발달,학습을 위한 사적 노력 - 재활치료 중심	발달,학습지원 미이용 이유
가족의 양육,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학령기 전후에 의심하여, 4~6세 및 7~9세 의심한 비율이 높음(평균 6.2세)	학년이 높아질 수록 일반학교 비율이 낮아지고, 대안학교(위탁) 혹은 특수학급 등 경로로 이동 비율이 높아짐 *제도진입 노력: 특수교육지원대상은 51.9%, 장애인 등록은 20.4%가 신청 경험 있음	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습센터, 도움반, 방과후 돌봄(학습 지원 관련) 등 학교의 지원 이용은 각각 약 11~17% 수준인데, 재활치료(언어,놀이치료 등) 경험은 절반 이상으로 높음 ⇒ 높은 사적비용부담 (사적비용지출 있다: 82.7%))	학교, 지역사회 등 의 발달,학습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임. (무엇을 할지 몰라서, 어디에서 이용할지 몰라서)

사) 소결

정신건강, 관계, 괴롭힘 경험, 인권보호 차별배제

높은 정신건강 욕구	타인과 관계 형성,유지 의 어려움	괴롭힘 경험/또래중심 가해	인권보호, 차별배제
최근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전문가 상담 비율이 68.6%, 현재 정신과 약물 복용 비율 51.6%로 정신건강 욕구가 높음. 정신과 약물 복용 이유는 '과잉행동 주의력결핍장애(ADHD)'가 가장 많고, 이외에 불안·공포·강박, 행동문제(공격, 분노조절 장애 등) 등임.	사람을 사귀는 것이 두렵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등으로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향. ⇒ (타인과 관계 지원) 다양한 또래 활동모임 참여 지원, 관계증진 프로그램 욕구 높음	지난 1년간 괴롭힘 경험은 28%, 주로 언어폭력, 관계 따돌림 등 정서적 괴롭힘이 주를 이루고, 이외에 신체적 괴롭힘 경험이 있음. 또래 중심의 가해자로, 괴롭힘 피해 후 소극적 대처 비중이 높지만, 교사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도 높음.	차별,배제를 경험한다고 비율: 66.1%.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 62.2%. ⇒ 인지기능은 장애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지적 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 경험은 발달장애인과 유사 ⇒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경계선 지능인 대상 인권범죄 교육 등

사) 소결

지원 욕구, 사회적 지원, 필요한 국가 노력

발달,학습에 대한 지원	가족 / 미래 준비 지원	사회적 필요 지원	지원강화를 위한 국가 노력
-조기발견,선별지원 체계 -재활치료 지원 -교사 이해 제고(경계선 지능에 대한) -학교 지원 확대 (학습종합클리닉, 기초학습지원센터 등) -경계선 지능 아동 상담 지원(학교생활, 진로계획을 위한) -전담 위탁학교 운영 등	-주보호자: 양육이 어렵다 90.2% <미래 걱정> -취업(1순위 중 59.4%) -부모 사후 혼자 남겨지는 것(2순위 중 29.5%) <미래 준비를 위한 희망 지원> -진로계획 수립과 자원 연계 지원 -관련 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 -졸업 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사업체 탐방 등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 진단 지원 -교육 지원(학교내, 지역사회 학습지원) -심리상담,치료지원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멘토-멘티 등) -직업능력 향상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제반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전담 기관, 조직의 설립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프로그램 개발

3. 제언

1) 기본 방향

○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점 정립과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해 **사회 구성원 중 일부 집단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의 하나**로 간주하는 **비병리적 관점의 접근을 병행하는 게 필요**

—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을 **다층적인 사회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으로 접근하는 방식** 필요

· 통합적 사회 인프라구성: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 마련

·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전문 지원이 가능한 전문 학교 및 전담 기관(센터) 및 이용 경로 마련

· 위기 상황(복합적 문제 상황,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전문적 개별 지원 (전문 사례 관리 지원 등)

2) 사회적 지원

1) 선별 및 조기개입 지원

—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개입을 할 수 있는 **선별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별 도구 개발**

— 경계선 지능 위험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조기 개입에 따른 사적 부담 완화**

— 경계선 지능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2) 학교 내 개별 학습 지원/ 진로 계획 확대

— 기초학습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개별 교육 지원 등 확대**(일대일 매칭 학습지원의 장기적 지원)

— **단계별 학교 진학 상담, 고등학교 시기 개별 진로 계획·상담**, 진학·직업훈련 등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한 지원 등

3) 지역사회 기관 등 지원 인프라 확대

— 지역사회의 경계선 지능인(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복지기관, 경계선 지능인(평생교육)지원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돌봄 및 사회적응지원, 가족지원 확대

2) 사회적 지원

4)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필요

— 경계선 지능 청소년(청년) 맞춤 직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 후 고용 유지 지원 등

— 경제활동 준비, 진입,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프로그램, 기관 운영 등)

— 경계선 지능인 경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제도 마련(경계선 지능인 고용한 고용주,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5) 위기그룹(정신과 질환 동반, 가족 등 지원체계 부재 등)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지원 시스템 마련

— 개별 사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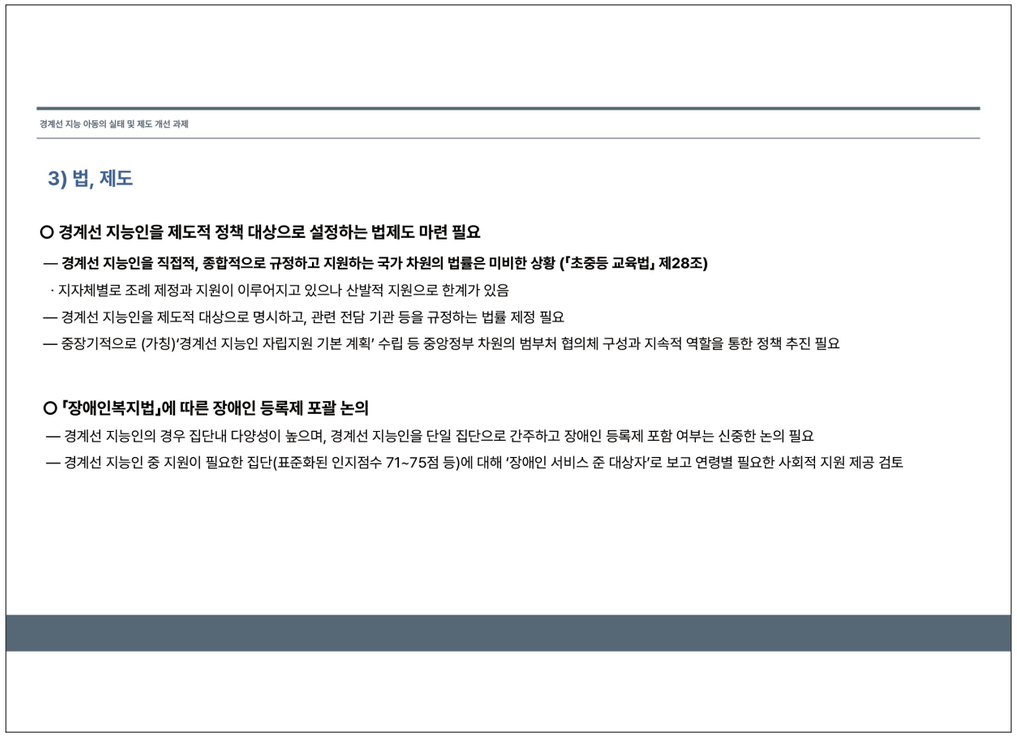
· 대상: 정신과 질환 등 중복 문제가 있는 사례가족, 가족 부재 등 사적 지원이 낮은 경우,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사례, 가족내 갈등 심한 사례 등

· 방식: 공공 사례관리 대상 포함, 경계선 지능인 전담 기관을 통한 전문 사례관리 등 고려

6) 전담 기관 설립 및 교육,복지 등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경계선 지적 기능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며 전인적 이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제반 인력(교육, 복지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 자료 개발, 교육 이수 지원 등)



종합토론

좌 장

배은경 교수(호남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토 론

박현숙 연구소장(경계선지능연구소)

최승숙 교수(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신유정 편집장(느린인뉴스)

김하영 팀원(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박현정 과장(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구미정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종합토론

1 **박현숙 연구소장**

경계선지능연구소

토론문

박현숙 연구소장(경계선지능연구소)

앞서 발표하신 발제는 경계선지능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조기발견부터 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발제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과 지원의 공동 목적에 대한 합의입니다. 교육·복지·고용 등 각 분야가 같은 목적을 공유해야, 다양한 개별적 지원이 아동의 성장 과정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제도를 우후죽순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경계선지능 아동이 실제 이용하고 이후의 생애주기와도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별과 지원의 목적, 선별체계, 공교육, 정신건강, 직업과 고용, 가정밖 보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에 관한 여섯 가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선별과 지원 목적에 대한 합의

1) 가정·학교·일터·지역사회에서 적응기능을 최적화한다

발제에서 제안한 조기발견과 장기적인 개별지원에 대한 요구는 경계선지능 아동이 소속된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9개 국가의 경계선지능 전문가 집단이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합의한 '경계선지능에 대한 지로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Martínez-Leal et al., 2020, Martínez-Leal et al., 2020). 이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의 지원 목적은 적응기능의 최적화에 있습니다(Martínez-Leal et al., 2020). 또한 적응기능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건강·복지·교육·고용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Martínez-Leal et al., 2020). 이는 정해진 한 개 분야만의 집중적 지원보다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뜻합니다.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 간 목적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향의 선별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교육부·고용부와 그 이외에 추가되는 모든 부처와 분야가 '경계선지능인의 소속된 사회에서의 적응 기능 최적화'를 공통의 목적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적용 가능한 조기선별체계 제안

1) 영유아건강검진을 활용해 조기 선별하고, 학령기 선별 및 지원과 연계한다

발제는 선별·진단체계와 검사 도구 개발, 조기개입과 부모 교육을 제안했습니다(발제문 3장). 조사에서 의심 계기는 부모 등 가족의 관찰이 49.7%,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와의 상담이 22.3%였습니다(30쪽). 의심 나이는 전체 평균 6.2세였으며, 조사 당시 미취학 아동 집단에서는 평균 2.5세였습니다(30쪽).

이는 영유아기 때부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선별될 수 있음을 가늠케 합니다. 새로운 선별체계를 만들기보다 이미 축적된 자료와 연구들이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체계를 이용해서 경계선지능의 위험성을 조기에 선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영유아검진으로 경계선지능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와 중재를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은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 제공되며, 이 중 3~8차 검진에서는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자조의 여섯 영역을 평가합니다(보건복지부).

인지·언어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나 '추적검사 요망' 결과를 받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경계선지능의 가능성을 포함해 발달 상태를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추가 평가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현재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정밀검사비 지원을 보완하여, '추적검사 요망' 영유아도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비, 발달상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보완을 요청합니다(보건복지부).

3) 부적응이 시작되는 1학년부터 경계선지능학생 선별과 중재를 지원한다

유아기에 이미 관찰된 경계선지능 관련 특성으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 습득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이 일찍부터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쌓인 뒤에 대응하기보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선별과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학령기에도 선별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학교장의 판별과 진단·상담·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근거 아래 학교에서는 교사 관찰과 보호자 상담, 선별검사 등을 통해 추가 평가가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고, 교육청 사업에 따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나 전문기관에 심층진단을 의뢰하거나 진단을 위한 심리평가비를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특정 학생의 경계선지능이나 학교 부적응을 의심할 때, 학부모에게 선별과 중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사가 지원대상으로 추천했을 때 학부모가 선별과 중재계획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법령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련된 선별·지원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막연한 낙인감 때문에 경계선지능 아동의 선별과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영유아기에 받은 선별과 지원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이어지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고 아동의 현재 상태에 맞는 선별과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다. 공교육 중심의 통합적 맞춤지원 필요

1) 현재 소속된 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발제에서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93.7%,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79.9%였습니다(31쪽). 학습과 관계의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만큼, 학교 지원은 학습과 관계 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선지능 아동의 학급 내 부적응은 당사자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소진과 또래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계선지능 아동이 소속된 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과 학교생활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경계선지능을 명시하고,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적 근거를 실제 학급 내 지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경계선지능학생의 지원 방향을 현재 학급에서의 참여와 적응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래 학년 수준의 교과 보충이나 기초학력 증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학급의 수업을 이해하고 또래와 함께 학습활동을 할 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기초를 보완하는 지원과 현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작은 역할부터 또래와의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학교생활의 만족감이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등교 기피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학교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민간 상담기관, Wee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학교 안팎의 자원도 이 목표에 맞추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에서는 학교 진도에 맞춰 교과서를 미리 읽고, 모르는 어휘를 찾아 뜻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학급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교실에서는 또래와 같은 진도의 수업에 참여하되, 학습 목표의 도달 수준을 아동의 현재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해당 진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공교육 중심의 지원을 위해서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부모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우려를 설명과 상담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학부모도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지원 협의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동의 거부나 민원을 우려해 필요한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아동과 또래, 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 정신건강의 돌봄: 당사자의 개인적 불행과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야 합니다

발제에서 최근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았거나 받기를 원했던 경우는 76.1%였습니다(31쪽).

이는 조사 참여 아동에 관한 결과로,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을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지원과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경계선지능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우울·불안·주의력·행동의 어려움 등의 동반증상이 심각하다면 아동의 특성에 맞는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는 정신건강 상담·치료와 전문기관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Wee체계, 학생 마음바우처 등의 지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러한 기존 자원을 경계선지능 아동의 필요에 맞게 연결하여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재활치료나 심리치료 비용지원은 인지기능 보완과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는 데에도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이 가정과 학교, 성장 후 일터에서 필요한 정신적 능력과 생활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직업훈련·취업·고용유지: 취업 이후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발제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으로 취업을 꼽은 응답은 59.4%였습니다(34쪽). 진로 준비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진로계획 수립과 자원 연계가 44.7%로 가장 많았습니다(34쪽).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발제도 직업상담과 훈련뿐 아니라,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발제문 3장).

고용노동부는 2026년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참여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직업상담, 일자리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이 진로를 준비하는 일선 학교에 잘 전달되어, 학교의 진로지도와 졸업 후 취업지원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지원의 방향은 취업 자체를 넘어, 당사자가 일터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적성과 강점을 찾고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 고용기관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미래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또래와 협력하며, 맡은 역할을 해내는 경험이 직업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이후에도 의사소통과 협력,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직무기술을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뿐 아니라, 그 직업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직무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취업 후에도 업무지시와 작업순서를 숙지하는 기술, 동료와 소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적응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할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구분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에서의 준비가 일터 적응과 고용유지로 이어져, 당사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바. 가정밖 보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직업생활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에 맞게 지원한다

발제는 가족 등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지역사회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발제문 3장). 이 논의를 가정밖 보호 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으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을 위한 검사비·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과 종사자 교육·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러나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퇴소 후 연계와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청소년쉼터는 선별·진단과 기관 간 지원 연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후 일부 청소년쉼터에서 검사·치료·생활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인된 사례는 지역사업과 전문기관 연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따라서 가정밖 보호 경계선지능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은 기존 지원의 퇴소 후 연속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는 선별부터 퇴소 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인력의 역량강화와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아동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자립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퇴소 전 경계선지능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꼼꼼히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퇴소 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후속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당사자의 삶은 교육·복지·고용으로 쉽게 나뉘지 않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 사이를 스스로 찾아다니다가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에 맞춘 공동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당사자와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가 공통의 목적 아래 협력하여, 입학·졸업·취업·퇴소의 전환기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경계선지능아동의 성장과 삶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 참고문헌

1) 발제 및 학술자료

이민경. (n.d.).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 [발제문, 제공 자료].

임성은, 이은주, 박현숙, 이주민, 민구홍. (2025). 가정외보호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11

보고서 원문: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31092

Martínez-Leal, R., Folch, A., Munir, K., Novell, R., Salvador-Carulla, L., &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nsensus Group. (2020). The Girona declaration on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he Lancet Psychiatry, 7(3), e8. https://doi.org/10.1016/S2215-0366(20)30001-8

논문 원문: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7197259/

The Girona declaration on BIF 2020. (n.d.). [선언문 전문 재게시자료]. Scribd. https://www.scribd.com/document/766003699/The-Girona-declaration-on-BIF-2020

2) 기관자료

고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25, 12월 27일). [고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보도자료]. 복지넷. https://www.bokji.net/not/pre/01_01.bokji?BOARDIDX=31523

고용노동부. (2026, 1월 15일). (참고) 고용노동부가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56

교육부. (2026). 2026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214&s=moe&fileSeq=1fe19c70aafc707f9b86f4212186708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 9월 21일). [모집] 2026년 고난도(경계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4차 대상자 모집 안내 [사업 공고].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3&bbsId=1021&nttSn=11082

보건복지부. (n.d.).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69

보건복지부. (2026, 6월 30일). 건강검진 [정책 안내, 수정일 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20200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26, 4월 6일).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느린 학습자 맞춤형 자립 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내일을 열다 [보도자료]. 뉴스와이어.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31728

인천광역시교육청. (n.d.). 『2024 읽기곤란(난독증)·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안내.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Info.do?nttSn=3304553&mi=

한국고용정보원. (n.d.).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https://m.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3)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n.d.).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2026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 2026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초·중등교육법 제28조. 2026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026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3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1&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n.d.). 학교보건법 제11조. 2026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6197

국가법령정보센터. (n.d.).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6년 10월 30일 검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265&efYd=20260301

종합토론

2 **최승숙 교수**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토론문

최승숙 교수(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는 BIF 학습자[1]의 학습과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고 공적 지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조기 발견과 공교육의 개별 지원, 지역사회 및 고용 지원을 함께 제안한 점에 공감한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BIF 학습자의 현재 삶을 지원하면서 성인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간 수행한 연구와 교육 현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복지 지원의 연속성 확보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발달단계별 교육적 요구와 생활상의 지원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발표문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의 1순위는 취업이 59.4%, 부모 사후 혼자 남겨지는 것이 16.7%였으며, 진로 준비를 위한 국가 지원으로는 진로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가 44.7%로 가장 높았다(34쪽). 이는 아동기 지원을 계획할 때부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삶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기 생활 경험을 분석한 연구(최승숙, 주은미, 한경근, 2025)에서도 BIF 학습자의 독립생활 준비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맞춤형 자립생활 및 직업교육,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최근 실시된 성남시(2026)의 실태조사 역시 학교 졸업 이후 지원 공백과 기관 간 연계 미흡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의 기초학습과 관계 형성, 청소년기의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 성인기의 직업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가 연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돌봄 여건의 변화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교육과 복지 각각의 지원 근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하되, 연령이나 소속기관의 변화로 필요한 지원이 종료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생애주기 지원은 각 시기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2. 교육과 복지 제도 사이의 지원 공백 해소

발표문의 조사대상 318명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비율은 34.9%였으나 장애등록 비율은 6.0%였다(27쪽). 두 제도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교육과 복지의 연계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장애등록 여부를 동일하게 이해하거나,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가 모두 특수교육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해서는 실제 지원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BIF 고등학생의 진로 및 진학 준비를 살펴본 연구(최승숙, 주은미, 임은주, 김민희, 2026)에서도 장애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 배치유형에 따른 지원 경험의 차이와 졸업 이후 지원 단절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확인되었다.

학령기에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성인기에는 일반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 인력과 교육자료를 연계하여, 개인의 특성과 지원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 영역에서는 BIF 학습자의 직무수행과 직장 적응 특성을 고려한 지원고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지원요구에 따라 사업체 현장훈련과 직무지도, 취업 후 적응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등록 여부와 제도별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누락되는 학습자가 없는지 점검하고, 학교에서 직업생활로 전환하거나 지원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정하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역할, 연계 절차와 예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졸업 이전부터 당사자와 함께 전환지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달 및 학습지원 미이용자 85명 중 63.5%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결과(29쪽)는 정보 제공과 신청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개인의 특성과 지원요구를 확인하는 평가체계 마련

발표자가 경계선 지능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 인지점수 71~75점 등의 집단을 '장애인 서비스 준 대상자'로 고려하자는 제안(40쪽) 역시 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해당 점수 범위에 속하면서 적응행동에서도 어려움이 확인되는 학습자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지능검사 점수의 측정오차와 실제 생활기능, 개인별 지원요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점수 범위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지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강도를 결정하고, 지원 이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령기에는 읽기·쓰기·수학 등 기초학습 수행과 수업 참여, 적절한 교수 제공에 따른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습의 어려움만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며, 담임교사·교과교사·기초학력 담당교사와 보호자가 함께 학습자의 수행과 변화를 살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특수교사·상담교사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선별과 진전도 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 강도를 조정하는 다층적 지원체계(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아울러 개념적·사회적·실제적 기술로 구성되는 적응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연령과 생활환경에 맞게 확인해야 한다. 발표문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책임 있는 선택과 정서 관리,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30쪽). 성인기에는 기능적 문해력과 금전관리, 직장 내 관계, 이동 및 건강관리 등 실제 생활 수행을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다. 개인의 강점과 선호, 교육 경험, 정서·행동 및 건강 상태,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여건을 함께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개별 지원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확인된 교육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시작되어야 한다.

1) 본 원고에서는 '경계선 지능'과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와 'BIF 학습자'를 병용한다.

4.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발표문에서 학업의 어려움은 93.7%, 또래와의 갈등은 79.9%로 나타났다(31쪽). 학교는 기초학습을 책임 있게 지원하면서 수업 참여와 사회정서 발달, 진로교육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수업의 교수 조정과 학교 내 보충·집중지원을 연결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및 교사 간 협력 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연계가 학교 안의 교육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구매와 금전관리, 공공기관 이용, 여가와 관계 형성 등을 생활 환경에서 반복하여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경험을 성인기 평생교육과 직업생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교육목표와 수행 변화를 공유하며 기초학습과 생활능력이 서로 연결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토론회의 취지를 고려하면 안전한 참여 환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괴롭힘 경험이 28.0%였고, 피해 경험자 중 30.3%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다(33쪽). 자기옹호와 도움 요청 교육, 또래의 이해 증진, 학교와 기관의 예방·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의 선호와 어려움을 표현하고 지원계획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도 교육·상담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5. 국가 차원의 교육자료 개발과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발표문에서 필요한 국가 지원으로 관계 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학습·발달 지원에서는 교사의 이해 제고와 장기적인 개별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29쪽, 36쪽).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발달단계와 지원요구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검증·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습, 사회정서, 자기결정, 생활 및 직업교육 자료에 쉬운 설명과 시각적 지원, 명시적 교수, 반복 연습과 생활 속 적용 방법을 포함하고,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 역시 실제 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양성과 현직 연수에서 다양한 학습자 이해, 평가, 수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직업지원 인력에게는 담당 역할에 맞는 교육과 사례지도, 보수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공통 역량과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의 실행을 지원한다면, 기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의 질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에 더하여 학습자의 참여와 생활 수행의 변화, 전환 이후 지원의 지속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진단 또는 의심 사례 등을 관련 모임과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하였으므로, 제시된 비율을 전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발표가 제안한 지원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연속성, 개인별 지원요구, 교육주체의 역할과 전문성이 함께 구체화되어야 한다.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가 필요한 교육과 복지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성남시(2026).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및 평생교육 지원방안.

이민경(2026).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및 제도 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발표문.

최승숙, 주은미, 한경근(2025). 경계선급 지적 기능 학습자가 겪는 성인기 생활에서의 경험 및 지원 요구에 대한 당사자와 부모,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논총, 41(1), 267-300.

최승숙, 주은미, 임은주, 김민희(2026). 경계선 지적 기능 고등학생의 교육 배치유형에 따른 진로 및 진학 준비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한 학부모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61(1), 273-299.

종합토론

3 **신유정 편집장**

느린인뉴스

토론문

신유정 편집장(느린인뉴스)

1. 들어가며: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의 현주소

최근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와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조기 발견과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지원 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영역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도구 개발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상담·사례관리와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첫 종합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25년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발제에서도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계선지능 아동이 학업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진로와 자립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계선지능인의 다양한 지원 욕구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경계선지능 아동의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공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넓혀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경계선지능 전문 매체인 〈느린인뉴스〉에서 여러 지역의 정책과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것은, 지원제도의 확대가 곧 실제 지원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토론에서는 기존 연구, 언론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 선별에서 실제 지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은 학습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용 선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해 왔다. 이어 올해에는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조기 발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별 이후 심층진단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확인한 경계선지능 우려 학생 5,592명 가운데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심층진단을 받은 학생은 2,256명(40.3%)에 그쳤다[1]. 인천광역시교육청도 2025년 중학교 1학년 학생 2만 8,11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보호자의 검사 동의를 얻어 심층진단을 신청한 학생은 152명이었다. 이 가운데 23명이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됐고, 실제 맞춤형 지원에 참여한 학생은 10명이었다[2].

이러한 사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선별 이후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호자 동의가 심층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보호자의 인식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낙인 우려와 검사 결과의 활용 방식, 진단 이후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이해 등이 보호자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진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녀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별 이후의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심층진단에서 확인된 아동의 특성과 지원 필요가 실제 교육·복지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기 발견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을 얼마나 많이 선별했는가뿐 아니라, 발견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3. 경계선지능 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중첩된 어려움

경계선지능 아동은 동일한 특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비슷한 인지적 수준에 있더라도 학습능력과 사회적 관계, 정서·행동, 일상생활 적응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양상과 정도는 아동마다 다르다. 이번 발제에서도 학업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 정신건강, 진로와 자립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확인됐다.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기초학력 향상과 인지·학습능력 개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습부진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등 정서·심리적 문제, 또래관계의 갈등과 학교폭력,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학

---

1) 느린인뉴스,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확대했지만…10명 중 6명은 진단 못 받아」, 2025.12.6.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413

2) 느린인뉴스, 「인천 중1 학생 전수조사, 지원은 '10명'뿐」, 2025.12.8.
https://www.slowlearner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391

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와 자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여건, 보호자의 양육 역량 등에 따라 어려움은 중첩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빈곤이나 아동학대, 가정 외 보호 등 기존 아동복지 영역의 취약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이라는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아동이 처한 환경과 보호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은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지원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202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발표한 『가정 외 보호 경계선 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자립교육과 전문적인 지원, 보호종료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거계약과 이사, 금전관리, 취업 준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갈등 대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의 이해 수준과 자립준비 정도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서도 개별보호관리계획의 내실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아동의 특성과 보호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경계선지능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련 연구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제는 기존 사업과 보호현장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어려움과 지원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가정 외 보호 아동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지원은 특정한 어려움이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기보다 인지·정서·사회적 특성과 가정 및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학습이나 인지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서·심리, 사회적 관계, 학교폭력 피해,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판단에서 나아가, '이 아동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지역별 지원 격차: 조례 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2020년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련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1) 조례 제정의 확대와 지원체계의 실효성

현재(26년 10월 27일 기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곳,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121곳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은 16곳 모두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당수가 평생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3)]

지역	광역자치단체 조례 (15개)	시도교육청 조례 (1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124개)	
			경계선지능(82개)	느린학습자(40개)
서울	○	○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중랑구(12) * 동대문구(2): 기본조례, 평생교육조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10)
전남 광주	△ (조례 통합 중)	○	광산구, 광양시, 남구, 무안군, 북구, 서구, 장성군(7)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완도군(4)
부산	○	○	기장군, 남구, 수영구, 중구, 해운대구(5)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8)
대구	○	○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4)	
인천	○	○	검단구(1)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해구, 연수구, 제물포구(6)
대전	○	○	대덕구, 동구, 서구(3) * 동구: 지원조례, 평생교육조례 제정	동구, 유성구(2) * 동구: 지원조례, 평생교육조례 제정
울산	○	○	북구, 울주군, 중구(3)	동구(1)
세종	○	○		
경기	○	○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19)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부천시, 오산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8) * 부천시: 평생학습기본조례 내 명시
강원	○	○	강릉시, 원주시, 삼척시,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7)	
충북	○	○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6)	
충남	○	○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8)	홍성군(1)
전북	○	○	군산시, 전주시(2)	
			완주군(1) * 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	
경북	○	○	안동시, 예천군(2)	
경남		○	양산시, 진주시, 함안군(3)	
제주	○	○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6. 10. 27.

그러나 조례 제정이 곧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관련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며,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지원 대상과 규모,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다. 조례 제정 지역 수만으로 실제 지원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담 지원기관의 설치 현황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시는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밈센터)를 개소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9월 광역 지원센터인 '경기온센터'를 개소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조례 제정 건수뿐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현황,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적인 지원 수준과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간 격차와 정보 접근성의 문제

지역별 지원체계의 차이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 관련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청소년 지원기관,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거주지역 제한,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 보호자와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발제에서도 발달·학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가운데 63.5%가 이용 방법이나 지원기관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느린인뉴스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정보와 기관정보, 연구자료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 〈모아보다〉를 구축한 배경에도 이러한 정보의 분산 문제가 있다. 이용자가 거주지역과 연령, 필요한 지원 분야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다만 정보 접근성의 개선만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다. 필요한 정보를 찾더라도 거주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여건, 전문기관이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5. 학습지원에서 자립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지원체계 필요성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정책은 그동안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그러나 경계선지능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교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달라진다.

이번 발제에서도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의 보호자들은 학업의 어려움(93.7%)뿐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어려움(83.3%), 미래에 대한 불안(64.5%) 등을 보고했다. 특히 자녀의 미래에 관한 가장 큰 걱정으로 취업을 선택한 응답이 59.4%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재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판단과 선택을 연습하는 기회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지원체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학령기에는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지만, 졸업 이후에는 직업훈련과 고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성인기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연령대별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각 사업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르다. 또한 자립을 단순히 취업이나 독립적인 주거의 확보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 취업 이후 직장 내 의사소통과 업무 적응, 주거생활의 유지, 금전관리 등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지원의 핵심은 연령대마다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졸업과 보호종료 등 주요 전환기부터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서비스를 담당할 기관과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이 종료되거나 담당 기관이 바뀌는 시점에 아동과 보호자가 처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전 지원 경험과 현재의 필요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가 차원의 법제화: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과 복지, 청소년·가족지원 등 여러 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근거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원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진단 체계,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지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정부 종합대책과 개별 지원사업이 확대됐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 국회 입법 현황과 주무부처의 문제

제22대 국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모두 12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8건, 교육위원회에 4건이 계류되어 있다.

〈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 발의 현황[4)]

회기	제안일	의안명	대표발의자	소관위원회
21대	2023.04.03.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3.06.08.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영희 의원	교육위원회
	2023.08.08.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4.01.08.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 의원	교육위원회
22대	2024.07.0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의원	교육위원회
	2024.08.2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5.02.0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5.02.0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5.06.13.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5.07.0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홍기원 의원	교육위원회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 의원	교육위원회
	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 의원	교육위원회
	2026.07.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처럼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정의와 범위, 주무부처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7건이 상정됐으나, 개념과 지원 대상, 주무부처 및 사업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선택을 넘어 실제 지원체계의 운영과 연결된다. 학령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이 크지만, 이후에는 복지와 고용,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교와 교육청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기관 등 기존 보호·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 2026. 10. 27.)

따라서 법률의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과 함께 관계 부처가 어떤 지원을 책임지고, 기관 간 연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원체계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오히려 별도의 절차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원 대상의 정의와 당사자의 권리보장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의 범위로 설명되지만, 같은 지능 수준에 있더라도 실제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마다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능지수뿐 아니라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사회적·적응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제시했다. 지능지수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경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는 등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진단검사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강조했다.

이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동의 지원 필요도를 보호자나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과 원하는 지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설명과 의사소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조기 발견과 개별화된 지원, 지역 격차, 생애주기별 지원의 연속성은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제화에서 함께 다뤄야 할 과제다. 법률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계 부처 간 협력, 진단과 지원의 비용 부담, 당사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 제정 이전에도 지원이 시급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지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과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기존 제도를 통한 지원까지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7. 맺으며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와 지원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와 지역 간 격차, 생애주기별 지원의 단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동안 마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계선지능 여부나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인지·학습·정서·사회적 적응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기 발견 이후 심층진단과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지원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원 기준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전문인력과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분산된 지원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생애주기별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령기의 교육지원이 진로·자립준비와 성인기 직업훈련, 취업 및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 졸업과 보호종료 등 주요 전환기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청소년·고용 등 관계 부처의 역할과 연계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당사자의 권리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을 단순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와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지원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조례 제정이나 사업 운영 실적을 넘어 실제 서비스 이용과 미지원 사유, 지원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에서 제기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후속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은 이제 범위와 질을 함께 높여야 할 시점이다. 국가 차원의 법제화 역시 이러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느린인뉴스 역시 경계선지능 아동과 보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당사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토론

4 **김하영 팀원**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토론문

김하영 팀원(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Ⅰ. 들어가며

모든 아동은 자신의 발달 속도와 특성에 맞게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교육·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우산 역시 아동복지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해 왔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체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발제에서 강조한 조기 발견과 개입, 공교육 내 개별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본 토론문에서는 발제에서 제시한 정책적 과제를 바탕으로, 초록우산의 지원 사례와 정부 자료를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Ⅱ. 초록우산이 확인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실태

초록우산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 14,468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규 지능검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으로 확인된 아동은 1,885명으로 전체의 13.0%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보호아동 7,822명 중 1,608명(20.6%)이 경계선 지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록우산 경계선 지능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1]	일반 세대[2]	계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기타(입양전, 일시)			
전체 지원 아동 수	4,214	210	66	7,822	2,156	14,468
경계선 지능 아동 수	159	27	0	1,608	91	1,885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2)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아동 외 일반 저소득 세대, 원가정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 등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17.7%(2,139명)가 경계선 지능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입소 아동의 19.9%(1,660명)가 경계선 지능 아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3]. 이러한 수치는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 지능 아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초록우산이 경계선 지능 아동 사례 295건을 분석한 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습뿐 아니라 치료와 보호, 자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기에 적절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 한 아동은 “남들은 다 수업 잘 따라가는데 왜 나는 못하나”라며 학업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드러냈고, 시험과 수행평가를 앞두고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등교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과 학업중단숙려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어려움이 장기간 누적된 아동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자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언어치료를 받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학습과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언어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보호와 자립 과정에서도 지원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정 내 체벌이나 학대를 경험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로맨스 스캠 등 범죄 피해에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아동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 연계와 사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구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습과 치료, 보호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아동의 삶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Ⅲ.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교육지원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기초가 되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현황과 지원 실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기존 연구를 근거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경계선 지능 학생 수와 지역별 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정확

3)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 26.09.07.

한 규모와 지역별 지원 수요, 기존 학습지원체계 내 지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실적은 전국 6,844명으로, 서울은 1,304명인 반면, 충북은 28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집행액 역시 서울은 약 18억 원, 충남은 약 1,4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경계선 지능 학생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최대 지원 회기는 충북 15회에서 서울 90회까지, 1인당 최대 지원액은 경기 125만 원에서 서울 540만 원까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4].

따라서 지역별 지원 수요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각 지역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적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에서 제안한 공교육 내 개별 지원체계 구축과 장기적인 학습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현황과 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과 안정적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경계선 지능 아동이 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개선과제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은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발달과 정서·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상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애등록 여부와 연령, 이용 기간 등 개별 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계선 지능 아동의 다양한 지원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 미등록 아동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지원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아동은 치료 필요성이 지속되더라도 연령 기준을 초과하면 바우처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2026년 5월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장애 미등록 아동은 5,360명[5]에 달해 서비스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활용되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역시 지원 기간이 대체로 1~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초록우산 조사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치료 중단 위기에 놓인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시설에서 보호 중인 한 경계선 지능 아동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곧 만 9세에 도달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에서는 월 약 26만 원의 치료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외부 후원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 26.09.07.

5)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 26.08.24.

이러한 점에서 발제에서 제안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아동의 치료 필요성보다 지원 자격이나 연령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적 한계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보호대상아동 지원체계의 개선과제

가.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의 지원 규모와 운영 한계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대신하는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아동의 특성에 맞는 일상적인 돌봄과 전문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고난도(경계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종합심리검사와 함께 인지학습, 정서·사회성 발달, 진로탐색 및 자립 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지원 규모와 운영 여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아동은 911명으로, 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 수를 고려할 때 사업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사례관리 단가는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회기당 35,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아동 1인당 최대 50회기, 총 1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지원 단가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치료와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을 기존 '아동보호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2026년 8억 3,800만 원에서 7억 1,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례관리 지원 목표 인원은 800명에서 707명으로, 최대 지원 회기는 50회에서 4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6].

정부는 사업 간 중복성과 집행률 저조 등을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사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지원 회기를 조정해야 했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집행률을 지원 수요의 부족으로 단정하기보다, 사업 참여와 수행을 제약하는 구조적 원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해소와 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통합 과정에서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은 기존 치료·재활 지원사업과 달리 아동의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자립 준비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통합하더라도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 종사자 전문교육 등 기존 사업의 핵심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보건복지부(2026)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976p**

나. 아동의 특성과 지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과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한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등의 아동보육사 배치 기준은 아동의 연령과 인원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아동보육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 2명당 1명의 아동보육사 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현행 인력만으로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과 지도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 인력의 배치 역시 아동의 실제 지원 수요가 아닌 시설 규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 아동이 다수 생활하더라도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아동 등에 대한 아동보육사 추가 배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를 고려해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가정위탁아동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경계선 지능을 가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시설보호아동뿐 아니라 가정위탁아동에게도 필요합니다. 초록우산 조사에서도 일반가정위탁 159명, 전문가정위탁 27명 등 총 186명의 경계선 지능 아동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가정위탁아동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가정위탁가정에서도 3년 이상 아동을 양육하고, 관련 교육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문가정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자체 예산과 위탁부모 부족 등으로 전문가정위탁 책정 및 전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록우산에서도 공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일반위탁가정이 아동의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부모가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아동의 양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전문가정위탁 전환 현황과 미전환 사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정위탁 전환 과정에 있는 일반가정위탁 아동도 필요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고,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게도 전문교육과 상담·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나가며: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지금까지 살펴본 현장의 사례와 정부 자료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개별 사업의 대상과 기간, 거주 지역과 보호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서비스가 단절되면서,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학교생활을 넘어 일상과 자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사업의 확대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 보호체계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개별 법령과 사업에 분산되어 있어 아동의 특성과 지원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이 특정 시기의 학습이나 치료, 취업 등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기 발견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 자신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책임을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합토론

5 **박현정 과장**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토론문

박현정 과장(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종합토론

6 **구미정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토론문

구미정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